



독일 대학교육의 개혁방향

손 승 남 | 순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랭킹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경향성이 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세계대학 순위는 다시 한번 독일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4년도 중국 상해 교통대학 조사에서 상위 10권을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게 내준 가운데 독일은 뮌헨공과대학이 45위, 타임지 조사에서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이 47위로 독일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50위권 진입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시인' 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오늘날 근대대학이 독일에서 태동하였지만 '연구'와 '학문'의 메카로서 대학의 세계주도권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은 미국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국가의 책임하에 대학간 서열없이 안정되게 유지되어 오던 독일의 공교육 체제가 세계화, 정보화의 파고에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영·미식 학사 및 석사제도(Bachelor/Master),

독일어 대신 영어강조, 대학등록금제 도입, 대학의 학생선발권, 교수자격시험 대신 주니어 교수제, 엘리트 대학 등 종래의 독일 대학제도 와는 거리가 먼 여러 제도와 관행들이 독일의 연방, 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독일 대학의 급격한 개혁은 그 성패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대학의 이념을 되돌아보게 한다. 중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독일, 그것도 빌헬름 폰 훔볼트라는 거장에 의해서 베를린에서 시작된 것이 1810년인데, 200여년 만에 '독일은 학문을 통한 도야, 고독과 자유의 품 안에서 연구, 연구와 교육의 통합'이라는 훔볼트적 대학의 이념을 과감히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을 모형으로 미국의 근대대학들이 속속들이 출현하였지만 대학교육의 세계적 지형은 정반대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독일대학은 지금 세계적 일류대학 즉 하버드, 스탠포드와 같은 미국의 대학모형을 어떻게 독일에 재건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II. 독일 대학교육의 상황

독일의 대학에서는 공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 왔다. 그 결과 대학문호는 크게 확대되었고,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독일대학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내적으로는 산업시대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산적한 대학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와 맞물려 대외적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나친 학생수는 도시 곳곳에 '과밀대학'을 탄생시켰고, 양질의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느슨한 학사제도는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배가시키고 있고, 장기학업에 대한 통제가 없어 평균학업기간이 14학기(7년)에 달하는 진기록을 보이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졸업 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학위를 지닌 청년실업률(독일 연방통계청: 2002년 223,598명)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제는 비단 학생영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의 인력 면에서도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수가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효율적 제도를 기피하여 우수인력의 해외유출현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통적인 교수 자격 논문 제도인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의 폐지를 각 주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교수 1인당 학생수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일어나 교육여건이 어려워지고, 학생지도나 논문지도 면에서도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학의 교육비와 직결된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디고, 연방과 주 그리고 대학간의 이견과 마찰로 인해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국내적 열악상은 그대로 대외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최근 세계 대학순위 조사결과를 보면 독일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에서도 영미의 우수대학이나 호주권 그리고 아시아권의 상위대학에 비해서도 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대학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하버드의 경우 대학경쟁력 향상의 비결이 대학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그 투자는 다름 아닌 새로운 연구에 대한 투자, 좋은 교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대학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III. 대학교육의 개혁방향

최근의 독일 대학교육 개혁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기존체제에 대한 구조개혁의 물꼬가 서서히 트이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전개되는 여러 대학개혁안 가운데 엘리트 대학 창출, 학·석사 제도 도입, 주니어 교수제, 대학등록금제 도입 등은 그러한 경향성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

1. 엘리트 대학 창출

세계화, 상호경쟁, 성취지향은 대학의 통제와 재정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독일대학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

“

최근의 독일 대학교육 개혁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기존체제에 대한 구조개혁의 물꼬가 서서히 트이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전개되는 여러 대학개혁안 가운데
엘리트 대학 창출, 학·석사 제도 도입, 주니어 교수제,
대학등록금제 도입 등은 그러한 경향성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

”

하고, 바닥에 떨어진 교육을 재건하고자 연방 정부가 내세운 대학정책이 바로 '엘리트 대학을 통한 수월성 제고와 학문영역에서 그러한 수월성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다. 연방 교육부 장관인 Bulmahn(SPD)은 2004년 초 '브레인 업(Brain up), 독일이 최우수 대학교를 찾는다'라는 제하에 엘리트 대학 구상을 내놓았다. 이 구상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급두뇌를 유인하는 최우수 대학을 만들어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독일의 우수 두뇌들이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미국이나 영국으로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경쟁을 통해서 연구력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려는 연방정부의 구상은 만성 재정적 압박에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구상은 독일 대학들 가운데 일정한 경쟁을 거쳐 우선 5개 대학교를 선정한 후 2006년부터 매해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며, 오는 2010년까지 추가로 약 12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한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Bulmahn은 최

우수 대학 선발경쟁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1단계 : 독일 각 대학교의 발전안 제출

하버드,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의 우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름의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 전력이다. 어느 분야, 어느 전공에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각 대학은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연구소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드러나야 한다.

■ 2단계 :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연방정부는 제출된 발전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 3단계 : 최고의 전략구상에 대한 포상

심사에서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매해 5천만 유로씩 5년간 지원을 한다. 선정대학들은 약관에 의거하여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다.

■ 4단계 : 새로운 경쟁의 시작

비록 첫 번째 경쟁에서 낙오한 대학이라도 몇 년 후에 다시 경쟁을 하여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1차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일정한 압박을 주게 되어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수월성보다는 평등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웠던 연방정부가 자유경쟁의 원리를 대학교육 혁신에 도입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거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안은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간에 견해와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적인 불만은 엘리트의 강조로 교육의 기회균등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독일정부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이다.

2. 학·석사 제도 도입

독일 대학교육 개혁안 중에서 대학구조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제도는 바로 영미식 학(Bachelor)·석사(Master)제이다. 성적과 성취지향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느슨한 학업에 박차를 가하고, 궁극적으로 독일 대학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이 제도는 199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볼로냐 협약 이후 각 대학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질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안에는 독일 대학생들의 긴 학업 기간을 단축시켜 미래의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속셈도 숨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연방의 교육 및 연구부에서는 2005년까지 유럽전역에 대학의 구조개혁이 이루어

지게 되면 학생교류, 졸업생의 고용문제에서 통일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디플롬(Diplom), 마기스터(Magister) 제도하에서 새로운 영미식 학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각주의 문화장관회의에서는 2003년 6월 독일내에서 학사 및 석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학사와 석사 모두 독자적인 직업획득을 보장하는 대학졸업장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디플롬 과정과 학사제도의 통합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디플롬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석사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테제 1). 학사는 최초의 직업준비를 위한 졸업장으로 고등교육의 정규졸업에 해당된다(테제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에 이어 전공심화나 확대과정에 해당된다.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석사학위과정 내에 일정한 직업실습 기간을 설정하며, 직업적 경험을 보장해 주는 과목을 개설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테제 5).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개설된 학사 및 석사과정에 대한 평가와 인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999년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인증자문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학위과정과 학점인정을 위한 최소요건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전담할 부서들이 생겨났다. 현재 6개의 평가 및 인증기관이 설립요건을 갖추고 2004년 4월 현재 417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공식 인증하였다(KMK, 2004). 이 중 학사가 180개 과정, 석사가 237개 과정이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국가, 대학, 직업간 교류와 협력

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중앙 인증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학사제도의 도입은 심오한 학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위과정이 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유리하고, 교육기간이 단축되며, 독일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교육의 학문적 질 저하, 하급의 대학졸업장 양산, 졸업생 양산으로 인한 핵심능력 축진의 난점 등을 들 수 있다.

3. 주니어 교수제

지식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얼마나,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 학문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문제는 대학의 사활에 직결된 만큼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교육인 박사과정과 교수진입의 과정에서 독일 대학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첨단 학문분야에서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생겨나 비교적 안정적이며, 대우가 좋은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로 독일의 인재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 여전히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박사과정은 경쟁적 선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우수 인재 확보에 불리하며, 박사과정생의 지도도 느슨한 편이다. 연구소나 기업과의 협동적 연구도 그리 활발하지 않아 연구에 이은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독일은 박사과정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거의 전적으로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전담되었던 책임을 학과나 연구소로 이관하려는 것과 박사과정 선발에서도 유인가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박사과정생의 지도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이 협력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를 마친 우수한 학생들과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박사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미국식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학외적 연구소나 기업과의 협력연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문후속 세대의 개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주니어 교수제를 꼽을 수 있다. 독일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지나치게 긴 교수준비 기간과 맞물려 있다. 이제껏 독일 예비학자들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야 할 30대를 대부분 지나간 박사과정 기간과 교수 자격논문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그나마 긴 학업기간에다 지나치게 늦은 교수진입으로 인해 40대가 넘어서야 교수가 될 수 있어 교수임용 제도에 대한 개혁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

2002년 초 다섯 번째로 개정된 대학교육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에 의하여 독일의 대학에 주니어 교수제가 시행될 근거가 마련되었다(제47조와 제48조). 이로써 무엇보다도 젊고 유능한 고급 인력을 연구와 교육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이 없이도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잠정적 대학교수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마다 다르나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국제적 저명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이

중요하고, 객관적 척도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문학술서가 평가장대가 된다. 전체 기간은 총 6년으로 우선 3년간을 계약한 후 평가 후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주니어 교수는 연구비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 받으며, 처음 3년간은 주당 4시간 그리고 나중의 3년간은 주당 4~6시간의 강의를 맡는다.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자격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한 실제 교수와 거의 비슷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니어 교수제는 대학교육기본법(HRG)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독일의 교수자격논문을 통한 교수사회 진입을 주장하고 있고, 보수적인 주정부(바이에른, 작센, 튀링엔)에서는 주니어 교수제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7월 주니어 교수제의 위헌성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함으로써 교수제도의 개혁을 힘차게 밀고 나갔던 연방정부와 주니어 교수제를 시행중인 주정부(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쉐레스빅-홀스타인, 라인란트-팔츠)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4. 대학 재정개혁과 학생등록금 도입안

독일 경제 침체의 여파가 대학교육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독일정부는 전면적 예산삭감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몇몇 주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 써야 할 예산을 감축하거나 대학인력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

다. 베를린, 헤센, 바이에른 주에서는 대학에 산의 삭감이 가시화되자 최근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주정부의 모순을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그 모순이란 주정부마다 학문과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절약정책(Sparpolitik)'의 구호를 내세워 유독 교육과 연구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대학재정의 최근변화를 볼 때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 열악상으로 인해 대학마다 연구지원금(Drittmittel)과 대학의 운영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대학의 연구지원금은 3천 1백만 유로였고, 이 액수는 2000년도 연구지원금에 비해 8.7% 증가한 것이며, 1997년에 비하면 28.5% 급증한 것이다. 2001년 3천 1백만 유로의 연구지원금은 전체 대학 평균으로 보았을 때 총 대학재정의 12.1%를 차지하며, 일반대학으로 한정하여 보면 17.8%를 넘어서는 수치다. 연구지원금을 내용별로 보면 독일 학술재단(33%), 연방(24.5%), 산업체(22.8%) 순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던 독일의 대학들이 점차 사적 부문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원금 이외에도 연방과 주정부는 물론 일부 대학들은 한편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고질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장기학생, 중도탈락학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록금 문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공교육을 기본으로 삼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정의의를 내걸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학교육기본법(HRG)에서는 첫 번째 학위 취득자에 대한 등록금 제도를 금지

“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에 투입되는 교육비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갈수록 학생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대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우려되는 점은 대학의 선발권 확대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성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 정책으로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나 개별대학의 사정에 따라 두 번째 학위 취득 학생, 자국의 학위를 지닌 외국학생, 노령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등록금제에 대한 입장은 각주와 대학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1999년 여름 학기부터 바이에른 주에서는 두 번째 학위 취득 학생에 대해 500유로의 수업료가 징수되고 있다. 1999년에 베를린, 니더작센, 바덴-뷔템베르크에서는 입학과 등록 수수료로서 100마르크(50유로)의 행정 수수료가 도입되었다. 이미 1997년 바덴-뷔템베르크에서는 장기 학생에 대한 1,000마르크의 수업료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고, 니더작센과 잘란트에서 수업료 도입방향을 확정하는 바 있다.

대학등록금 찬성론자의 견해처럼 수업료 징수로 대학재정의 약 20%를 충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과 개인, 대학과 대학간의 경쟁 유발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것인지, 반대

론자의 견해처럼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도 옳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분배정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상품' 이전에 '인권'이라는 주장대로 공교육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학의 수업료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독일대학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어쩌면 수업료를 둘러싼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어느 정당에서 주정부의 교육정책을 주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채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기민당, 기사당은 수업료 징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 사민당, 녹색당은 사회정의와 분배정의를 전면에 내세워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나오며

세계화의 거센 풍랑과 경쟁의 논리는 여지 없이 독일의 대학교육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

일에 최근 들어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재정 문제 전반을 책임지는 사립대학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점이나 타국에서의 학업이 보편화되고 강좌를 영어로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징수제 도입이 여러 주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고, 영·미식 학사와 석사제도가 수용되었으며,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지향하는 엘리트 대학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가히 독일의 대학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대학인력 구조개혁에서도 주니어 교수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기존의 짐(Habilitation)을 벗고 교수자격 및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독일 대학개혁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대학개혁의 성공이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달려 있다고 볼 때 협력적 연방주의는 민주적인 장점은 있으나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혁안을 두고 정당간, 연방이나 주 정부와 학생간, 대학당국과 교수 및 학생간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 인접국가에서는 대학개혁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는 그 동안의 논쟁을 접고 국립대학 공익 법인화, 성과주의 재정지원, 수업료 도입, 고등 교육 질관리를 위한 외부평가, 외부인 참여의 강력한 대학집행 기구조직, 관리자로서의 대학총장의 위상강화 등을 담은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과 비슷하게 공교육 체제를 유지해 오던 오스트리아가 2001년 역사상 최초로 수업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나 영국에서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는 독일의 대

학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에 투입되는 교육비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갈수록 학생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대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우려되는 점은 대학의 선발권 확대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성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 정책으로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울러 학업기간의 단기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직업적 자격과 전문적 직업인 양성 쪽으로 대학교육의 방향이 선회하면서 '학문을 통한 도야'의 이상이 땅에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유럽통합의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그리고 독일 사회 및 경제의 개혁의 파고 속에서 200여년 전 훔볼트가 대학의 이상으로 제시하였던 '고독과 자유'의 품 안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배우면서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역설적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독일의 대학개혁 방향은 갈수록 원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손승남

전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해석학』, 『한국교육의 이해』(공저), 『교육의 탐구』(공저), 『Bildungsgangdidaktik』(공저), 『Wilhelm Dilthey und die pädagogische Biographieforschung』 등이 있다.